

2019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 평가 추진

현장점검 거쳐 오는 8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공동체 등급 평가를 위한 현지점검 모습.(사진 왼쪽은 전남 완도 금당통발공동체, 오른쪽은 경남 창원 진해연안통발공동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는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모범공동체 상위 20%(46개소)와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8개소) 등 56개소를 대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공동체 평가위원회, 지방청, 지자체(수산사무소) 공무원 등 2~3명을 1개 조로 편성, 총 8개조의 현지 점검단은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지자체 예비 평가의 타당성·적정성을 검증했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하순경 2019년 자율관리어업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등급결정 및 2019년 최우수우수장려 공동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자체에서 추천한 우수공동체는 경기 평택 평택호내수면공동체, 충남 태안 병술만공동체, 충북 옥천 향수내수면공동체, 전북 익산 익산내수면공동체, 전남 완도 금당통발공동체, 경남 남해 설리공동체, 경남 창원 진해연안통발공동체, 경북 포항 하정 2리공동체 등 8개소이며, 현지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 후보공동체를 결정한다.

한편 올해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 평가대상 공동체 수는 총 1,105개소이다.

한국수산회에서 '어업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한국수산회에 설치된 자율조정협의회에서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수산회로 연락해 주시면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해소방안을 마련해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분쟁조정 비용은 무료입니다.

- 분쟁조정 사례접수 -

- 대상 :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및 관련단체
- 내용 : 공동체간 분쟁 및 공동체와 미가입어촌계간 분쟁 등
- 문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02-589-4604)

2019년 상반기 신규 참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어선어업 4개 공동체 포함, 9개 공동체 신규 참여

지난해 말 1,108개소였던 공동체 수는 금년 상반기 9개 공동체가 신규로 참여하고 1개 공동체가 선정 취소되어 금년 6월 말 현재 1,116개소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5개소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신규 참여한 9개 공동체 현황은 2면 참조.)

면 마을어업 1개소, 어선어업 4개소, 양식어업 2개소, 복합어업 2개소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강원 1개소, 충남 1개소, 전북 1개소, 전남 1개소, 경남 5개소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신규 참여한 9개 공동체 현황은 2면 참조.)

2019년 자율관리어업 제주권 워크숍 개최

동해권 워크숍은 10월 17~18일 강원 양양 솔비치리조트에서



자율관리어업 제주권 워크숍에서 공동체 지도자들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2019년 자율관리어업 제주권 워크숍이 7월 12일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제주 관내 자율관리공동체 지도자를 비롯, 일선에서 자율관리어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산회 주관으로 열린 제주권 워크숍에서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 양문주 부장)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및 공동체 역할(한국수산회 천명길 컨설팅트) △전남 여수 안포공동체 우수사례 발

표(위원장 이희한)와 함께 리더쉽&조직관리 등 특강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어업인들은 해양수산 정책사업비 배정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공동체를 미참여공동체에 비해 우대해 줄 것과 제주도 자율관리어업 담당 공무원에 대한 관련 업무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제주권 워크숍은 전남권, 서해권, 남해권에 이어 올들어 4번째로 열렸으며, 올해의 마지막 동해권 워크숍은 10월 17~18일 강원 양양 솔비치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지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 가 도와드립니다.

자율관리어업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의 주춧돌

우리 바다, 우리 수산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인식의 전환
자율관리어업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어업인 스스로 지키고 가꾸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어장관리 활동



어장청소, 해적생물구제, 바위닦이 등으로 수산자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요.

자원조성 활동



채포체장 제한, 금어기 준수, 어획 능력 삭감, 종자방류 등으로 자원을 관리해요.

경영개선 활동



공동어업장, 판매 방법 다양화, 가공품 개발로 공동체의 소득을 증가시켜요.

질서유지 활동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로 공동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성공사례 현장전수교육

하동연안통발공동체, 목포낙지연승공동체 방문교육



하동연안통발공동체 어업인 33명은 7월 2~3일 전남 목포 낙지연승 공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 현장전수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수산회 김기찬 컨설턴트로부터

공동체 평가방법 등 자율관리어업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이어 목포낙지연승공동체의 서광일 사무장으로부터 자원관리를 비롯, 공동생산판매 등 공동체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진도낙지통발공동체, 거제새우조망공동체 방문교육



진도낙지통발공동체 어업인 35명은 7월 4~5일 경남 거제새우조망 공동체를 방문해 새우조망 어구개량 사업 및 자원관리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 한국수산회 양문주 부장과 서봉규 컨설턴트로부터 자율

관리어업 사업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 방석리공동체, 양양 수산공동체 방문교육



경북 포항 방석리공동체 어업인 31명을 7월 16~17일 양양 수산공동체를 방문해 권영환 위원장으로부터 자율관리어업 발전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수산공동

체가 강원도의 대표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기까지 추진해 온 다양한 활동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한국수산회 김관규 컨설턴트와 양문주 부장으로부터 자율관리어업 정책과 관련한 교육을 받았다.

서산수협·근해통발수협 어업인, 꽃게 종자 40만미 방류



서산수협과 근해통발수협은 7월 11일 태안군 신진도 인근 해역에 꽃게 수산종자 40만마리를 방류했다.

이번 행사는 수년째 매년 해오고 있는 행사로 자율관리 어업인과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피 군락지에 방류했다.

이번 방류는 기후 변화에 따른 꽃게 자원 감소로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어 수산자원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선정

경인북부수협·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선정

경기인천 북부 지역과 서해안 인근 어민들이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엄격히 지키는 조건으로 소형 수산물 포획이 가능한 세목망을 사용하는 등 어업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 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7월 15일 밝혔다.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어종별로 연간 허용된 어획량 상한선을 지킬 경우 자발적 관리감독하에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시범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2월 말부터 2개월간 총 28개 단체가 응모했으며, 정부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뒤 중앙수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 단체가 제시한 3개 규제 완화안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경인북부수협은 어구를 5통에서 1통만 사용하도록 줄이는 대신, 멸치나 젓새우 등을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인 세목망을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는 총허용어획량을 지키도록 CCTV를 설치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중간세목망을 사용하고 어류 분류망에 지퍼를 설치할 수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첫 시범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을 가로지르는 지족해협에서 낙하산 모양의 물돛을 설치한 어선이 개불을 잡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신규로 참여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제덕어선업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윤계도)

-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1. 31. / 22명
- 공동체 유형 : 어선어업

연안들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남정택)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무전동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1. 31. / 10명
- 공동체 유형 : 어선어업

한산어류양식회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이정숙)

- 소재지 : 경남 통영시 한산면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1. 31. / 17명
- 공동체 유형 : 양식어업

삼천포연안통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은숙)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서동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1. 31. / 22명
- 공동체 유형 : 어선어업

속초시 4개어촌계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장재수)

- 소재지 : 강원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3. 7. / 347명
- 공동체 유형 : 복합어업

동부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홍민호)

- 소재지 :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5. 27. / 105명
- 공동체 유형 : 복합어업

삼천포연안복합자망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김동복)

- 소재지 : 경남 사천시 동금동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6. 3. / 13명
- 공동체 유형 : 어선어업

마량전복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최종)

- 소재지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1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6. 14. / 34명
- 공동체 유형 : 양식어업

대로 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정병천)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대산읍 광암2길
- 참여일자 / 참여인원 : 2019. 6. 17. / 63명
- 공동체 유형 : 마을어업

특별기고

‘어촌의 미래, 젊은 피 수혈에 달렸다’

해양수산부와 통계청이 지난 6월 발표한 ‘2018년 귀어귀촌 현황’을 보면 어촌으로 향한 귀어가구가 917가구로 전년보다 1.2%(11가구) 증가하고, 귀어가구 10가구 중 6가구가 4050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귀어인의 평균 연령은 51.1세, 동반 가구원의 평균 연령은 32.6세로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시급한 어촌 상황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어촌의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967년에 114만명이던 어가 인구가 2018년에는 12만명으로 거의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층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1.2%인 342개 읍면동이 소멸될 위험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어가 인구 50년 만에 1/10로 감소

그간 어업인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 구축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하여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

용해오고 있지만, 이제는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마을에 일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만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어촌이 소멸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국정과제를 설

정하고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매년 귀어가구 수가 900여 가구 수준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까다로운 어촌계 가입 조건, 어업허가정수 등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가입 기간이나 가입 금액 등 어촌계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농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가능한 귀농에 비해 귀어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선어업이나 양식어업 등 공유수면에서의 허가나 면허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이진형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장

선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 기간 등을 표준화하여 어촌계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촌계 표준규약을 제정·보급하는 한편 개방형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어촌계를 선정해 포상하고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

도 시행 중이다.

어촌계 문호개방, 어업인 의지에 달려

하지만 어촌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어업인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서 어촌계 정관을 개정해야만 그 문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귀어귀촌은 교육·상담, 홍보, 창업 자금 지원 등 정부와 귀어귀촌종합센터의 역할에 더해, 어촌계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려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덧붙여져야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새로 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은 흔히들 어촌의 정서는 배타적이라고 말한다. 어촌계에 가입시켜 주지 않

고,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나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귀어인들은 조상 대대로 어촌계 단위의 공동경제 활동을 해온 어촌의 정서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근면 성실한 태도와 좋은 유대관계로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귀어 전 종사했던 직업과 다양한 경험들을 어촌에 기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면에 지역주민들은 한정된 어촌계 자원은 기존 어촌계원들에게 부족하고, 어차피 귀어인들은 잠시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란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쉽사리 열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장 눈앞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지 않으면 마을의 미래는 없다. 어업인들이 귀어인들의 멘토가되어서 귀어인 교육이나 체험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귀어인을 보듬어 안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미래를 보고 자율관리어업을 선택한 어업인들의 시선이 이제는 바다를 찾아오는 젊고 유능한 귀어귀촌인을 향할 때이다.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고등어 등 7개 품목 … 어업인 8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 신청해야



정부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받는 어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새우잡이 어선에서 조업모습.

7개 품목에 대해 약 17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다.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로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해 지급 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11~12월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으로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함·재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됐다. 이후 2015년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는 고등어·명태 등

‘어구 일제회수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경남 거제 일원에서 90일간 시범 운영



정부는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7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90일간 경남 거제도 일대에서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어구 일제회수 제도는 해양수산부·지자체가 어구 일제회수 기간을 설정해 어업인들이 수중에 설치한 자망, 통발 등의 어구를 회수하게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집중적으로 해저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제도이다.

어업활동 중 유실 등으로 발생하는 폐어구는 해양오염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피해를 유발한다. 정부는 어구 과다사용을 막기 위해 어구 사용량 제한, 어구실명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중의 어구를 지도·단속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연근해어업 주요 어장에서 폐어구 등 침적 쓰레기 수거하는 ‘연근해 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어업인이 어구를 철거하지 않거나 조업 활동을 하는 경우 어구 손상문제 때문에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 거제 수협(조합장 엄준) 및 (사)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회장 김대성) 등 지역사회의 협조를 통해 ‘어구 일제회수 제도’ 시범 운영을 추진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대상 해역을 나눠 구역별로 정화활동을 전개한다. 어업인들은 구역별 정화활동 기간 동안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어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연안정화의 날(매월 셋째주 금요일)’과 연계하여 바닷가 쓰레기 치우기 등 어업인의 자발적인 해양정화 활동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 시범 운영 후 해양환경 개선효과 등을 분석하고 참여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한국수산회, '수산물 간편조리법 공모전' 시상식



한국수산회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국민 참여형 수산물 간편조리법 공모전' 결과 10개의 우수 조리법을 선정하고, 7월 12일 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은 1인~2인 가구, 독신 남녀, 직장인 등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을 통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총 195개의 조리법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보리새우 특유의 단맛과 짠맛의 균형을 맞추어 젊은층이 선호하는 덮밥 조리법을 제안한 '보리새우동'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꼬막과 당면의 이색적인 조합으로 눈 길을 끈 '꼬막당면볶음', 와사마요(와사비+마요네즈)와 치즈를 활용한 색다른 가자미요리인 '와사마요가자미치즈볼'이 각각 선정됐다.

전북 어업인들 "서해 EEZ 바다모래채취 강력 규탄"



전북지역 어업인 1,000여명은 7월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 EEZ 불법 바다모래채취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또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모래채취에 대해 군산해양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어업인들은 "서해 EEZ 골재채취업자들의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채취에 이어 신규단지 지정과정에 200여곳의 시범 시추가 허가없이 불법으로 실시됐다"며 집단 저항에 나섰다.

심명수 자율관리사업 전북연합회장은 △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처벌 및 관리감독자의 공식사과 △ 불법으로 파해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 무허가 불법시추에 기반한 신규 단지 지정절차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2019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동해 북 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 함정 상시 배치 및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 단속선 공동순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중국 무허가 어선들의 우리 수역 집단침범 조업과 서해 NLL 해역 등 민감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해 바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발령



남해안에 독성을 지닌 해파리가 대량 출현해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월 12일 경남·전남·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주의단계 특보는 100m²당 1마리 이상 발견될 때 발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2013년, 2016년 발령된 적 있다.

해수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6월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평균 45cm 크기로 100m²당 0.65마리가 발견됐는데, 이달 들어 남해안과 제주에서 100m²당 평균 1.04마리가 확인됐다고 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의 촉수에는 독이 있으며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하다. 노무라입깃해파리에 쏘이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 촉수를 제거하고 상처를 씻어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7월 12일 경남·전남·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주의단계 특보는 100m²당 1마리 이상 발견될 때 발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2013년, 2016년 발령된 적 있다.

공동체 탐방 / 제주 귀덕1리 자율관리사업 공동체

깨끗한 제주바다 조성에 앞장... 카약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주바다 환경대상을 수상보드를 들고 귀덕1리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투명카약을 체험하고 있는 관광객 있는 귀덕리 장영미 위원장.

"우는 아이 젖 더 준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위원장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관청 등을 찾아가서 우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늘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마을 어업인들의 대표이니까요."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마을공동체의 대표인 장영미(65)씨는 올해로 6년째 어촌계장을 맡으며, 귀덕1리를 제주의 모범적인 자율관리 공동체로 만든 장본인이다. 지난해 태풍 때 파손된 공동체의 낚시체험장을 도에서 보수해 주기로 한 것도 이같은 장 위원장의 읍소(?) 덕택이다.

지난 2004년 자율관리사업 초창기

에 공동체를 결성한 귀덕1리는 자체 규약을 통해 얇은 바다를 '할망바당'으로 설정해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쓴다. 특히 날씨가 좋을 때 2~3일간 마을 공동여장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이 때 잡은 채취 판매액은 많이 잡으나 적게 잡으나 공동 분배함으로서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 해녀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입니다. 이곳의 경우 50여명의 여성어업인 중 70세 이상이 절반을 넘고 있어,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장 위원장은 힘든 물

질을 하겠다는 해녀 지망생도 부족하지만, 해녀학교를 졸업해도 어촌계의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귀덕1리의 경우도 예전에는 외지인의 어촌계 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했으나 지금은 2년간 이 지역에 거주하고, 이후 2년간 나잠에 종사하면 어촌계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루면 언젠가는 마을이 황폐화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진입장벽 완화로 귀덕1리는 장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에만 6명이 어촌계원으로 가입하고, 현재 1명이 가입을 위한 심사과정에 있다.

이와 함께 귀덕1리 공동체는 깨끗

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13일을 자체 바다청소의 날로 지정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청소작업 불참 시에는 명절 때 지급하는 배당금에서 공제하는 등 패널티 제도를 마련함으로서 전 회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으로 2017년 제18회 제주바다 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소라, 미역, 해삼 등 해녀의 물질작업만으로는 소득의 한계를 느낀 공동체는 자자체 보조를 받아 마련한 투명카약 운영으로 어업외 소득향상에도 힘을 쓴다. 아름다운 귀덕 바다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카약과 전기자전거는 자체 운영하는 해상 낚시터와 횟집을 연계하여 향후 공동체의 주력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 모두는 활달하고 추진력 있는 성격의 장 위원장과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마련한 일련의 사업들이다.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림 분회장과 제주해녀협회 수석이사를 맡아 제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장 위원장이 귀덕1리 공동체에 불어넣을 새 바람이 기대되고 있다.